

개인의 부정부패 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 흥 태** · 이 창 배*** · 심 현 정****

〈요 약〉

부패방지 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부정부패, 부정청탁, 차별적접촉이론, 중화이론, 설문조사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원 보안행정학 석사(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부교수(교신저자)

**** 신시내티대학교(미국) 형사사법학 박사과정(공동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 방법 |
| IV. 분석 결과 |
| V. 논의 및 결론 |

I. 서 론

2018년 2월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I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 인식(CPI)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국 가운데 5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52위로 1995년 부패지수 측정 시작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MBC 뉴스, 2018.02.22.).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역시 10점 만점 중 7.94점으로 2016년의 7.83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7.12.6.).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언론사 그리고 일반기업 및 시민 전반의 부패 관행과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에게는 청렴을 강조하고, 시민단체나 민원인 등 일반 시민에게는 공직자들의 부패 감시자 및 신고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던 과거의 정책들과는 다르게, 청탁금지법은 일반 시민의 부패행위인 부정청탁행위도 부패행위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시행하는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여전히 공무원, 언론인, 교사들과

1)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535901_22673.html

같이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장지원, 2013; 박중훈, 박준, 정동재, 2017). 부정부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부정부패행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부정부패행위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부정청탁관련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정부패의 정의 및 특징

1) 부정부패의 정의 및 유형

부정부패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분 부패와 민간부분 부패로 구분되고(박준·고길곤, 2017), 공공부분의 부패는 고위공무원의 부패행위인 거대부패와 일선 공무원들의 부패인 작은 부패로 나눌 수 있다(Rose-Ackerman & Palitka, 2016: 26, Rose & Mishler, 2010: 145). 민간부패는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된다(이천현, 2015). 부정부패의 범위를 공적 직위에서의 규범위반이나 일탈이라고 규정한 연구들은 ‘공직부패’라고 부정부패를 칭하기도 한다(진중순·서성아, 2007). 부패 관련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을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범위를 민간으로도 확장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부패입법인 뇌물법(Bribery Act, 2010)과 부정행위방지법(Fraud Act, 2006)은 부패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공적영역에서의 부패와 사적영역에서의 부패를 엄격히 구분하

지 않고 있으며(박경철, 2016), 관련 국내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에서도 부패의 개념을 민간까지 확장하여 부패행위와 부정청탁행위를 정의하였다. 해당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행위 주체를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혹은 공직자에게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을 청탁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일반인들이 공직자에게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을 청탁하는 행위 또한 부정청탁행위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2) 부정부패의 특징

부정부패행위는 다른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부패행위 측정의 어려움이다. 부패는 일관된 척도에 따라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정 주체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진종순·서성아, 2007). 부패문제는 통상적으로 비가시적이며, 당사자가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부패경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두 번째 특징은 부패행위 발각의 어려움이다. 부패행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보고되거나 직접적인 손실이 가시화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성상 외부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발각되기 어렵다(박중훈 외, 2017: 86). 외견상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인지 정상적 활동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소 있다.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에 따라 부패를 바라보는 인식 및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마다 사람들의 인식차가 커서 한 사회에서 부패로 인식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Rose-Ackerman, 1999: 5). 부패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의사결정은 부패의 도덕적 비용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Klitgaard, 1988: 69). 전수일(2003)은 우리나라 부패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설명하여 권력지상주의, 연고관계 중시주의, 정의적(靑韻的) 인간관계 중시주의, 강한 의식주의(儀式主義)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하였다.

2. 부정부패행위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부정부패행위와 차별적 접촉이론 및 차별적 강화이론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학습한 결과이고, 특정 기술은 물론이고, 행위의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와 같은 인지적 성향까지도 학습하고 발전시킨다고 설명한다(이순래 외, 2012: 262-265). 또한 범죄행위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며, 범죄적 환경에서는 범죄적 특성을 학습하면서 안내자와 교사자와의 상호작용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이완희·유완석, 2014; 이윤희, 2011; 황성현, 2015).

차별적 강화이론은 부패행위를 학습하게 되는 사람들과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부패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민수홍 외, 2017). 주변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주체가 처벌을 받는지 혹은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따라 행위를 중단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가령, 부정부패 행위를 시도하였더니 금전적 이익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 계속 지속할 수도 있는 반면, 반대로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부정부패행위와 중화이론

사이크(Sykes)와 맛짜(Matza)의 중화이론(1957)은 범죄현상을 범죄자들이 관습적인 가치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비합법적 행위와 관습적 행위를 오가며 표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범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상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충성심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중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이윤희, 2011: 309-310).

이 이론을 부정부패행위에 적용하면,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일반인은 늘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이후 위에서 열거한 중화 전략을 적용하여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모면하려고 시도한다. 가령, 부정청탁행위를 한 이후 '나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였

다고 책임을 부인하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피해를 부인할 수도 있다. 혹은 가족이나 조직, 회사를 위한 행동이니 용서받을 수 있다며 충성심에 호소하여 본인의 죄책감을 중화시킬 수 있다.

3. 부정부패행위 관련 선행연구

Pazmandy(2011)는 개인의 부패피해 경험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는데, 개인의 부패피해경험은 부패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부패하다고 느낄 때, 거리낌 없이 부패행위를 저지를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연루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Klitgaard, 1988). 국내에서도 권오성(2005)과 전수일(2003)은 연고 온정주의, 답례문화 및 선물관행, 경조사문화 등 전통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사회문화적 전통이 학습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문화적 학습이 차별적 접촉 및 강화이론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노연상·임창호(2014)는 사회적 요인으로 경찰 청렴을 설명하면서 경찰 조직문화인 권위주의적 문화, 경직된 조직구조 등의 문화가 경찰 청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학연, 지연, 혈연 중심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부패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경찰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일관성 있는 청렴성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부패 수준인식과 부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용복(2015)은 시민들 간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 부패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고길곤·조수연(2017)의 연구에서도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경험자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부패를 바라보는 인식수준에 관한 Frederickson(2015)의 연구는 거리의 역설(paradox of distance)이론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않았거나 혹은 접근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추상적인 차원의 정부에 대해서는 대개 “부패했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Rose와 Mishler(2010)도 러시아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주로 친구와의 대화나 매스컴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발견하였다.

부정청탁의 관행수용도와 부패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떡값이나 촌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관행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부패행위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실제 금품 등을 제공할지가 달려있다고 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시민들이 부패를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수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관행수용도가 높아 선물이나 촌지 등은 부패가 아닌 관행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길곤·조수연, 2012).

그러나 Treisman(2007)는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사이의 여러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부패경험을 측정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정부패관련 연구는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측정한 연구보다는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연구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패행위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부패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방법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내의 부패실태조사 다수에서 응답자들의 부패인식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부패경험 비율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나타났기 때문에(박중훈 외, 2017:10), 부정부패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패행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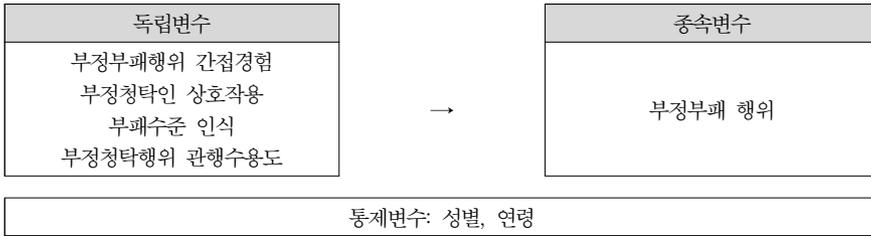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청탁금지법 시대의 부패인식과 경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인구비례할당 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CATI) 방식을 적용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이다.

2)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과 부정청탁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수준인식과 부정청탁행위 관행수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 변수의 측정

연구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 및 측정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의 부정부패경험’은 공직자에게 금품,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이항척도로 재코딩하였다(없음=0, 있음=1).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청탁행위의 관행수용도로 구성되었다. <표 1>에서 구체적인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표 1〉 독립변수의 측정

구성요소	문항수	문항내용	척도
간접경험	1	▶ 귀하께서는 귀하를 제외한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 등 주변사람들이 공직자에게 금품,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간접경험)	경험유무
상호작용	1	▶ 귀하는 공직자로부터 금품, 접대, 선물 등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험유무
부정부패수준인식	4	▶ 귀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우리나라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일선행정기관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패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6점척도

관행 수용 도	5	▶ (공통질문)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부정부패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구청 공무원이 납품업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물 받았다(선물) ▶ 공공기관 인사에서 기관장이 비슷한 조건의 승진 후보자 가운데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를 승진시켰다(승진) ▶ 공무원이 자녀혼사에 납품업체로부터 1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축의금) ▶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았다(식사대접) ▶ 경찰관이 명절 때 관할업체에서 준 30만원을 받아 기관운영비로 사용했다(떡값)	6점 척도 (역)
---------------	---	--	-----------------

*경험유무(0=없음, 1=있음)

**6점 척도(1=전혀 심각하지 않다, 2= 심각하지 않다, 3=별로 심각하지 않다, 4=약간 심각하다, 5=심각하다, 6=매우 심각하다)도

간접경험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간접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상호작용은 타인(공직자)이 자신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측정하였고, 부패수준인식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고위공직자,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일선행정기관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패수준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부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²⁾

관행수용도는 부정청탁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물, 승진, 축의금, 식사대접, 떡값³⁾ 지급에 대하여 얼마나 관행적으로 수용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행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6점 척도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로 성별(남성=1)과 연령을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여부에 미치는 주요 변수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종속변수의 승산비(odds ratio)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변량 통계분석 기법이다.

2) 이 연구는 공무원의 수준과 부정부패 유형 각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자신의 부정부패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기에 위 문항들을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지 않고 개별문항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사기업이나 개인이 명절 등에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현금을 지칭하는 은어

IV. 분석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 49.7%, 여성 50.3%로 남녀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24.6%로 가장 많고 40대와 50대는 각각 20.9%, 20.3%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대가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이 4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직이 21.9%, 자영업자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이 49.5%, 그 외 지역 50.5%로 확인되었다. 가구당 소득은 200만원대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표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97
	여성	503
연령	20~29세	160
	30~39세	182
	40~49세	209
	50~59세	203
	60대 이상	246
직업	자영업자	193
	공무원	33
	학생	56
	회사원	499
	무직	219
가구당 소득	200만원 이하	151
	200~299만원	321
	400~499만원	125
	500~699만원	185
	700만원 이상	116
	무응답	102
전체	1,000	100.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3>에서 제시된 기술통계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부정부패행위를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대한 학습기회를 측정하기 위한 간접경험과 부정청탁 상호작용 여부는 각각 평균이 0.368, 0.09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36.8%가 주변사람들이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상호작용은 약 9%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패 수준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공무원의 집단별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5.133$). 그 다음으로 고위공직자($M = 5.102$), 중앙부처공무원($M = 4.569$)의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평균 3.453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부정부패행위	.086	.281	0.00	1.00	1000
간접경험	.368	.483	0.00	1.00	1000
상호작용	.094	.292	0.00	1.00	1000
부패수준인식					
국회의원	5.133	.920	1.00	6.00	1000
중앙부처	4.569	1.068	1.00	6.00	980
고위공직자	5.102	.963	1.00	6.00	990
중하위직	3.453	1.174	1.00	6.00	977
관행수용도					
선물	3.136	1.543	1.00	6.00	997
승진	2.382	1.373	1.00	6.00	981
축의금	3.354	1.529	1.00	6.00	995
식사대접	3.786	1.530	1.00	6.00	1000
떡값	2.650	1.503	1.00	6.00	988

관행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물, 승진, 축의금, 식사대접, 떡값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식사대접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가장 높았고($M = 3.786$), 축의금($M = 3.354$)과 선물($M = 3.136$)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승진과 떡값에 대한 관행수용도는 각각 2.382과 2.650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행위에 비하여 수용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3.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에서 제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모형 적합도를 우선 살펴보면, Cox & Snell R^2 은 0.200, Nagelkerke R^2 은 0.443으로 나타났고, 이 모형의 종속변수인 부정부패경험의 변량 중에서 44.3%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간접경험 ($B=2.375$, $p<.001$), 상호작용($B=2.897$, $p<.001$), 중하위직에 대한 부패수준인식 ($B=-.330$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부정청탁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수준인식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관행수용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는 부패행위의 원인을 개인의 인식에 근거하여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정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에 집중된 경향이 많았으며,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한 직접적 검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지원, 2013; 박중훈·박준·정동재, 2017). 이 연구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행위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표 4〉 개인의 부정부패행위 영향요인

변수	B	S.E.	OR
성별(남성)	.569	.309	.566
연령	.062	.119	1.064
간접경험	2.375***	.384	10.754
상호작용	2.897***	.329	18.125
국회의원	-.101	.194	.904
부패 중양부처	.005	.187	1.005
수준인식 고위공직자	-.030	.181	.970
중하위직	-.330*	.150	.719
선물	.101	.116	1.106
관행 승진	-.092	.119	.912
수용도 축의금	.049	.114	1.050
식사대접	.037	.109	1.037
떡값	.012	.110	1.012
Constant	-2.599*	1.314	.074
$\chi^2(13) = 205.191, p < .001$			
R^2	Cox & Snell $R^2 = .200$, Nagelkerke $R^2 = .443$		
-2LL	347.394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이 간접경험을 보유하거나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직접 부정부패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인들이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부정부패행위를 강화되거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부정부패행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권오성, 2005; Klitgaard, 1988; Pazmandy, 2011). 따라서 향후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방정책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우호적인 태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신고된 2,311건의 신고 건수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9건만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되었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는 1.6%인 38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은 행위가 신고 되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회전반의 인식으로 연결되었고, 부정부패의 예방과 대처에

매우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주의를 적용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부정부패행위의 높은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주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일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부정부패의 간접경험, 부정청탁의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와 부정청탁행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사전 교육 및 감시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조계표·이영주, 2015). 비단 형사적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관과 조직차원에서 응당한 처분과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주변인의 제보와 고발 등 제 3자 신고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한 부패방지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길곤·조수연, 2017).

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부패수준의 인식 중에서 일선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만 유의하였다는 점은 향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Frederickson(2015)이 설명한 ‘거리의 역설’이론에 의하면,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대개 부패하였다고 인식하지만 자주 보게 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패수준 인식이 낮을수록 직접적 부패경험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 공무원에 대한 부패 수준인식이 부정부패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역량과 태도가 부패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정책 역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다양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부정부패 행위유형과 빈도를 조사하는데 다소 제한적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변수의 부족으로 인해 이론에 근거한 차별적 접촉의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주변인의 부패행위

이후 처벌을 목격하였던 경험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알게 된 경험 등과 같이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차별적 강화 등에 관한 이론적 설명의 뒷받침이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풍성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길곤, 조수연 (2017).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 31-56.
- 권오성 (2005).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 노연상, 임창호 (2016). 경찰청렴성의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5, 129-154.
- 민수홍 외 공역 (2017). *범죄학이론*. 파주: 나남출판사.
- 박경철 (2016).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강원법학*, 47, 1-34.
- 박준, 고길곤 (2017).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간 괴리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503-2529.
- 박중훈, 박준, 정동재 (2017). *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 한국행정연구원.
- 이순래, 이정상, 박철현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92, 219-255.
- 이완희, 유완석 (2014).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 청소년 비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9, 217-239.
- 이윤희 (2011). *범죄학*. 서울: 박영사출판사.
- 이천현 (2015).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26, 267-303.
- 장지원 (2013).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전수일 (2003). 한국의 권력형 비리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8, 85-107.
- 조계표, 이영주 (2015). 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5, 129-159.
- 조재현 (2016).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7, 95-120.
- 진중순, 서성아 (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 45, 233-257.
- 황성현 (2015). 청소년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225-250.
- Frederickson, H. G., & Rohr, J. A. (2015).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Routledge.
- Klitgaard, R. (1988). *Controlling corrup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Pázmány, M. (2011). Socio-Economic Influences on Corruption Perception--Empirical Evidence from 27 European Countries. *Hamburg Review of Social Sciences*, 6(2), 52-80.
- Rose, R., & Mishler, W. (2010). Experience versus perception of corruption: Russia as a test

case. *Global Crime*, 11(2), 145-163.

Rose-Ackerman, S. (1999). Political corruption and democracy.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363.

Rose-Ackerman, S., & Palifka, B. J. (2016).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eisman, D. (2007).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corruption from ten years of cross-national empir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211-244.

【Abstract】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Kim, Heungtae · Lee, Chang-Bae · Shim, Hyunjung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idence-based anti-corruption policies via a survey of people in various job categor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any corruption and related factors. Researchers analyzed a secondary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cluded a sample of 1,000 adults aged over 19.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In addition, their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corruption behavior. Thu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ocusing on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and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d as an at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ideas by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Keywords: Corruption, Improper solicitation,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Neutralization theory, Survey